

보도자료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송	2025.12.17.(수) 11시 00분
■ 요청	즉시 보도		
■ 일시	2025.12.17.(수) 09시 0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정의당		
■ 문의	강남규 (정의당 공보차장, 010-4419-4990)		

【총4쪽】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배송 야간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막대한 대관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총체적 부도덕 기업 쿠팡에 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 추궁을 촉구해야 합니다.

3. 이에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플랫폼C,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이 공동으로 쿠팡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되는 산재·과로사, 노조 탄압과 정경유착까지 쿠팡의 불법·부도덕 행위는 끝이 없다”며 “창업주와 전·현직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하는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단독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쿠팡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되는 과로사·산재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기업임에도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는 김범석을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배송 시스템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는 “쿠팡은 법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처럼 군림하며 노동권과 시민의 삶을 파괴해 왔다”며 “국가는 해외 사례처럼 강력한 제재와 사회적 개입으로 쿠팡의 반복되는 산재·개인정보 침해·노조 무력화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입점업체·소비자에 대한 구조적 갑질에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번 청문회는 쿠팡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정호철 경실련 부장**은 “쿠팡은 보안과 내부통제는 외면한 채 지난 6년간 관피아 62명을 영입하며 정부 감독과 국회 규제를 무마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쿠팡과 같은 기업으로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피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최효 쿠팡지회 사무장**은 “올해에만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쿠팡은 사과도 재발 방지도 없이 노동강도와 압박을 키우고 있다”며 “정치권은 경영진과의 밀실 만찬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만나 유급 휴게 보장과 일용직 권리 보호, 노조 탄압 중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쿠팡은 관피아 영입과 미국 상장을 방패로 불공정 행위와 노동 착취 책임을 회피하며 이익은 미국으로 보내고 고통은 한국에 남기고 있다”며 “국회는 외국인 총수 처벌 강화와 관피아 차단, 쿠팡 방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괴물 기업의 불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축소·은폐하며 기본적인 보안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단·단체소송 도입과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노동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플랫폼C,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 발언순서
 - 사회 : 이종희 노동당 총무국장
 - 3당 각 대표 발언(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 참여연대(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상임간사), 경실련(정호철 경제정책팀 부장) : 쿠팡의 불공정거래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
 - 디지털정의네트워크(오병일 대표)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제도 개선 촉구
 - 쿠팡물류센터지회(최효 사무장) : 쿠팡의 노동문제, 새벽배송과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 플랫폼C (홍명교, 초국적 자본 쿠팡의 비밀 대관 로비와 착취)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서로 대체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쿠팡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는 철저한 청문으로 진상을 규명하라!

국내 유통·물류 플랫폼을 사실상 좌우하는 초대형 기업 쿠팡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노조활동 방해와 단체협약 미이행, 심지어 전직 법조인과 공직자를 동원한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불법·탈법 행위는 사회적 권리 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 국회가 예정한 ‘쿠팡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산재 은폐 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쿠팡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은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사실이 반복되는 사고로 이미 드러났다. 쿠팡에서의 노동은, 새벽배송이 불러온 장시간·고강도 야간노동, 알고리즘 기반 노동 통제, 초단기 계약과 일터 불안정, 안전조치 미비 등 노동자를 과로와 위험에 상시 노출시키는 작업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쿠팡의 ‘산재·사망 대응 매뉴얼’이다. 이 문건은 노동자 사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노동자 생명 구조도, 현장 보전도 아니었다. 오직 기업 이미지 관리, 언론 대응, 책임 회피 자료 생산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쿠팡의 경영 체계가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뒤로 미루고 있음을 증명한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 운영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쿠팡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 규모만으로도 전례가 없다.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임에도, 쿠팡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 통지·보상 원칙, 내부보안 시스템의 점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처벌 등 기업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구조적으로 경시하는 경영 기조의 결과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에 갑질하는 쿠팡

쿠팡은 유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와 자영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 왔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거래상 약자에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전형적 구조다. 더 나아가 쿠팡은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기 위해 검색·노출 알고리즘을 왜곡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소비자 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사우대 행위까지 벌여 왔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까지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러한 불공정 거래 구조는 쿠팡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다시 반복될 여지가 크다.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켜 온 쿠팡

쿠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5년 가까이 지연해왔다.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해온 것이다. 나아가 쿠팡은 조합원 부당배치, 부당징계, 노동조합활동 방해를 진행해 왔고, 이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법과 제도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교섭 제도를 쿠팡은 기업 차원에서 무력화시켜 온 것이다.

노동자의 죽음,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 노조탄압과 교섭 회피,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 모델이 가진 구조적 결과이자, 경영자의 빈약하고 천박한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인재다. 결과적으로 보면 쿠팡의 성장 핵심 비법은 노동권·시민권·소비자 권리·공정경쟁·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며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청문회는 개별 위법을 묻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법·탈법을 일삼는 기업 운영 방식 전체를 살펴 규명하고 바로잡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쿠팡의 구조적 범죄와 책임을 규명하는 진상규명 청문회가 되도록 책무를 다하라.
- 정부는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면 재조사·피해자 구제·엄정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공정거래 당국은 쿠팡의 납품업체·자영업자 상대 불공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해태, 노동권 침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 쿠팡은 노동자 사망·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제출하라.
- 쿠팡은 단체협약 체결 회피를 멈추고 성실한 교섭에 즉각 임하라.

2025. 12.17.

참가단체 일동

1. 권영국 정의당 대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이 또 있습니까? 그 목록만 읽어도 쿠팡의 악행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새벽배송과 야간노동,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업재해, 유족에 대한 정보 차단과 산재사망 은폐를 위한 매뉴얼 작성, 노조활동 방해 위한 재계약 거부와 블랙리스트 작성,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탈적인 갑질,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끌어모아 여당 원내대표에게 수십만원의 점심을 대접하는 전방위적 대관로비, 4여년을 끌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교섭 해태, 편법과 탈법 투성이 쿠팡에 항의하기 위해 본사를 찾은 노동자들에 대한 수갑 연행.

창업주라는 자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늘 열릴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운운하며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에게 한국이 그리고 국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라면 저토록 몰염치한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강한승 전 대표도, 박대준 전 대표도 모두 사임했다는 이유로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도덕하고 몰염치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블랙 기업입니다.

이런 쿠팡, 절대 용납해선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는 창업자부터 개인정보 유출 당시의 대표들까지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 불출석하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 강한 권한으로 쿠팡의 민낯을 들춰내야 합니다. 국회는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쿠팡에 대해 단독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2. 이상현 녹색당 대표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쿠팡 새벽배송 서비스가 초래한 노동문제에 이어, 사상 최대,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그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쿠팡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물류기업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지만 오늘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회피를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김범석 의장을 불러 증인석에 앉혀야 할 것입니다.

와중에, 쿠팡 한국법인이 미국 법인에 수조 원대 대출을 보증해 줘서 사업을 확장했다는 사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빅3’ 유통기업보다 10배 이상 많은 전직 공무원 출신 쿠팡의 대관 인력이 사안을 무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것이 양파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혁신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기존의 노동안전망과 최소한의 법규범을 무시하고 ‘반노동 반인권’ 혁신을 벌여온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쿠팡에 출근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쿠팡에서 고강도 야간노동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것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물류센터 노동자, 택배기사 등 27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3명입니다. 쿠팡의 로켓배송, 새벽배송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연료로 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편리보다는 생명안전’이라며 쿠팡노동자에게 연대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쿠팡은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착취적 이윤추구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리한 시스템을 ‘경쟁력’으로 쿠팡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동안, 과로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쿠팡의 노동자들이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수갑이 채워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자본공화국입니까. 더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쿠팡 진짜 사장들을 청문회에 세워 똑똑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을 좀먹고 굴러가는 쿠팡의 운영체계를 낱알이 밝혀 바로잡으십시오. 녹색당은 쿠팡 노동자, 쿠팡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쿠팡 문제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쿠팡 진짜 사장 김범석 출석시켜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똑바로 책임져라!
쿠팡은 죽음의 배송시스템 즉각 중단하라!

3.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입니다.

저는 대표이기에 앞서, 4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쿠팡의 악행을 직접 목격해 온 사람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쿠팡은 예사 기업이 아닙니다. 전직 경찰, 공무원, 법조인을 앞세워 사실상 법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쿠팡에 쉽게 손댈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라는 청문회는 안오고 여당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희희덕거리는 쿠팡을 혼이 쏙 빠지도록 엄하게 제재할 방법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물류기업이 노동조건과 단체협약을 무시할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됩니다. 국가의 인프라와 예산을 노동권을 파괴하는 기업에 맡기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택입니다.

프랑스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 연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 벌금은 비용일 뿐이라는 허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인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보다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법과 제도로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급진적 실험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세상의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노동당의 정치는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피해를 만들고

이들의 고통과 죽음 위에 이익을 쌓았다면

정치는 위임된 권한을 사용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술과 혁신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싼값에 사람을 갈아서 만든 이익을 사회로 되돌릴수 있어야하며, 독점적 물류 체계를 장악한 기업이 공공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 소유와 운영 방식에 대해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당이 생각하는 정치적 상식입니다.

산재와 죽음이 반복, 은폐되는 기업에 국가의 물류 체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일상 플랫폼으로 군림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기업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당은 쿠팡의 반복되는 악행을 멈추기 위해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법과 민주주의 위에 일개 자본이 군림할 수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이연주 간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일으키고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쿠팡을 규탄하고 국회에 철저한 청문회를 촉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3일,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을 모집했습니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을 모집한 결과, 620명의 시민분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경영진, 그중에서도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 앞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기는 커녕, 책임 축소와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기만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나 돌이켜봤을 때,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쿠팡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기 그 이전, 쿠팡에는 자영업자에게 저지른 갑질의역사가 있습니다. 쿠팡의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악명높은 ‘아이템위너’는 판매업체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묻따’ 반품정책으로 판매자 반품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경쟁사보다 1원이라도 낮추지 않으면 모든 고객을 빼앗겨버린다는 압박, 자사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무조건 환불해줘야 한다는 부당함은 오로지 판매업체 점주가 감당해야하는 몫입니다.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는 쿠팡 생태계 속에서 판매수수료와 광고비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렇게 남은 판매대금마저 정산주기 40일이라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뒤늦게 판매자 손에 쥐어집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쿠팡의 입점업체 갑질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해왔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PB 상품 리뷰 조작, 자사제품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에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끼워팔면서 소비자를 쿠팡지옥에 빠뜨리고 서비스요금을 6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로 시장흔들기 하면서 입점업체 점주에게 부당하게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운영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도 공정위에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매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 쿠팡 갑질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쿠팡 갑질 방지법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쿠팡 갑질 방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와 정부의 태도가 결국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일으키고도 땀땀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쿠팡 청문회는 단순히 쿠팡에게 개인정보 유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이 저지르는 거대한 해악, 시장훼손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럴 의지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쿠팡만 바라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부기관과 국회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쿠팡 대관으로 유입되었다더라, 어느 국회의원들이 쿠팡대관과 부적절하게 식사를했더라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어떻게 국회가 쿠팡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위하는지 심판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를 똑똑히 명심하고 이번 쿠팡 청문회 엄중하게 임할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5.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반갑습니다.

경실련 정호철 부장입니다.

저는 쿠팡의 관피아 영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의하면,
쿠팡이 보안 강화와 내부통제는 뒷전이고,
지난 6년간 대관 중심 경영으로
정부의 감독과 국회의 규제를 무마하기 위해
관피아 62명을 영입해,
최악의 정보유출로 귀결됐다고 합니다.

쿠팡은 올해만 보안 감독·규제 관련 정부·국회 퇴직자 28명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경실련은
관피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등 5개부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약 90%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고,
그 중 고용부가 9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민간기업 총 56건으로,
그 중 고용부 공무원들의 쿠팡 계열사 이직 사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고용부가 쿠팡 물류전문 계열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부 6급 공무원의 이직에 대해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부가 쿠팡의 로비스트가 된 것" 쏘 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기관과의 부정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소위 ‘관피아 방지법’ 도입과 함께 강화됐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쿠팡 등 신생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재취업 승인 사유를 분명히 하여
관피아를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6.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이자, 물류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쿠팡지회 사무장 최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님, 왜 쿠팡 대표이사만 만나십니까? 쿠팡 대표이사와는 고급 만찬을 나누고,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일하는 쿠팡 노동자들은 외면하실 건가요? 쿠팡 노동자들과도 만나주십시오. 이 사회가 자본가 권력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뒤흔치고 당당합니다. 올해 들어 쿠팡 현장에서 무려 8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제대로 된 사과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법정 무급 식사시간 1시간 외에 노동자가 숨 돌릴 수 있는 유급 휴게시간이 1분 1초도 없고, 현장에서는 목표 수량과 속도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쿠팡은 못 본 척 회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합니다.

원내대표님, 쿠팡 대표이사와 은밀하게 만나 이야기 나눠야 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국회가 이제는 이 사회에 꺼내놓고 고쳐야 하는 진짜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재계약과 출근반려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다음 출근이 막힐까 두려워 아파도 참고, 위험해도 참고, 무리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불안정한 일자리가 강요받는 구조적 압박이며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이 일용직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돈 없으면 쿠팡 뛰어라”라는 말이 대중화될 정도로, 이 사회는 쿠팡 일용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일용직 노동자에게 너무 멀리 있는 권리처럼 취급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기업은 이를 ‘순수 일용’으로 지워버리고, 제도는 그 지워짐을 바로잡는 데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법이 있어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을 떼이고도 “다시 일해야 해서” 싸움을 망설이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주 수요일, 쿠팡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을 면담 요구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라는 두가지 죄목을 씌우고 뒷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습니다. 쿠팡은 경찰 공권력 뒤에 숨어 지켜보기만 할 뿐 이 상황에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회에는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힘이 자본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 활동은 그 부당함에 저항하며 자본가의 입맛대로 바뀌는 불법/합법 이분법 잣대로 착취 당하는 노동자에게 힘줄을 가지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쿠팡이 구조적 불평등에 밀린 사람들의 선택지가 되는 곳이라면,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인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를 조직해서, 그 노동자들의 든든한 선택지, 든든한 안전지대가 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투쟁!

7.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3년 전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을 부사장급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행정관들,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세청 출신 인사 100여 명을 공격적으로 영입해 왔습니다.

쿠팡이 왜 역대 연봉을 주며 이들을 모셔갔겠습니까?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사기극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1만 6천 명 노동자의 밥줄을 끊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납품업체의 고혈을 짜는 갑질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 현장 검사를 사전 대비하고,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패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괴물이 된 쿠팡 자본의 ‘불법행위’ 지키는 호위무사일 뿐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괴물 기업 쿠팡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며칠 전까지 쿠팡 대표였던 박대준과 70만원 어치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노동자 과로사와 퇴직금 미지급, 과도한 수수료 등 산적한 문제들을 다룰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법적으로 그 회사 대표랑 고가의 점심을 먹은 겁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논란이 되던 지난 11월 서영교 의원이 쿠팡 상무 A씨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를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간 쿠팡은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해왔습니다. 미국 기업이란 게 그 이유입니다. 실제 쿠팡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모기업 '쿠팡 Inc.'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법인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과로사로 죽게 만들고,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수료

를 수탈하는데 벌어들인 돈은 뉴욕 증시의 주주들과 미국 본사로 귀속되는 겁니다. 이익은 월스트리트로 보내고, 고통은 한국에 남는 겁니다.

쿠팡이 왜 미국 증시에 상장했겠습니까?

쿠팡 김범석은 주식 1주당 29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 10%로 의결권의 76%를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상으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미국 상장을 통해 국내 법과 원칙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김범석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을 수년간 피해왔습니다. 사익 편취나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겁니다.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의 자원을 수탈해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쿠팡은 데이터와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해 이윤을 미국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쿠팡이 하는 꼬라지가 꼭 디지털 시대의 동인도회사 아닙니까?

국회가 더는 말로만 그쳐선 안 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총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전직 공직자들의 대관 로비를 막기 위해 소속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최근 5년 내에 조사했던 기업으로는 직행을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독점과 알고리즘 노동 착취를 규제하는 쿠팡 방지법도 필요합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및 노동 관련법에 전면 도입해야

쿠팡의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입니다.

글쎄요. 우리 쿠팡 없이 잘 살았습니다.

쿠팡의 성공이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기만, 노동착취로 이뤄진 것이라면, 쿠팡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게 낫습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저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8.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오병일 발언문

지난 11월 쿠팡에서 3,370만명에 이르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75%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쿠팡은 공격자가 5개월 동안 무단 접속을 하여 이용자 정보를 빼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자가 신고한 이후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후에도 쿠팡은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하여 일부만 공지함으로써 사태를 왜곡하고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쿠팡을 통해 유출된 정보들은 실로 심각한 정보들입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뿐만이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주문정

보는 개인의 생활패턴·소비성향·건강상태·경제환경 등을 세밀하게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쿠팡은 이를 단지 '주문정보'라는 한마디로 축소하지만, 이 정보들이 이미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다면 피싱 등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지난 상반기에 SKT 고객 약 27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T,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까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는 개인정보나 보안과 관련하여 법제가 미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미 어떠한 보안조치를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인증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법에서 요구한 기본적인 보안 정책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안에 대해 투자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잠시의 사회적 비난만 감수하면 될 뿐,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들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 직접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소송이나 단체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단소송, 단체 소송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면 수천만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국회 정무위 심사소위는 이 조항을 빼고 과징금 상한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과징금 상향도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대해서도 전체 매출액 3%에 턱없이 부족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해도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습니다. 현재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금전 손해배상을 포함한 집단구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스위스, 튀르키예 등 3개국 뿐이고, 한국은 그조차 피해자 구제제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들이 집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단체소송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안에 소홀이 한 이유는 소비자의 기본권보다 자신들의 수익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만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쿠팡은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도 무시해왔습니다. 쿠팡은 6년 이상 1만6천명 이상의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처음에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회사 고유의 인사평가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거듭해왔습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아직도 블랙리스트를 없애지 않고 있고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자신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경찰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위는 이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의 문화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만큼 쿠팡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쿠팡이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위와 사업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갔으면 합니다.